

#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68]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3. 2. 28 | 발행인 : 민무숙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제도 도입 논의에 따른 제주도내 예상지역 분석 및 시사점

강 권 오 연구위원

###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제주도내 관련 시설 및 성범죄자 현황
3. 제주도내 성범죄자 거주제한 예상지역 분석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1. 들어가며

- 최근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연속적으로 출소함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표출하였고, 실제 해당 범죄자들이 거주하거나 거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안,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에 대한 내용을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법무부 보도자료, 2023.1.26.)
  -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 린스포드(9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이웃집 남성에게 강간,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법안으로서, 2005년 5월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된 이후 미국 내 46여개 주에서 제정된 아동 성범죄 처벌 법안의 모태가 되었음<sup>1)</sup>
  - 해당 법률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과 더불어, 전자발찌 평생 착용, 특정 시설(학교, 공원 등)로부터 2,000피트 이내 주거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중인 법안으로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법무부의 법안 도입 추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성범죄 재발방지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사회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내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떨어뜨렸다는 구체적인 연구나 분석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무리한 거주지 제한이 실질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법안 도입 시 아동인구 및 관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시 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의 거주 공간이 매우 제한될 수 있는 바, 법안 도입 및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는 총 570개소(제주시 407개소, 서귀포시 163개소), 초등학교는 120개소(분교 6개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up>2)</sup>,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제주지역 성범죄자 수는 42명(제주시 33명, 서귀포시 9명)인 것으로 나타남

1) ‘STOP CHILD PREDATORS’ web page (<https://www.stopchildpredators.org>)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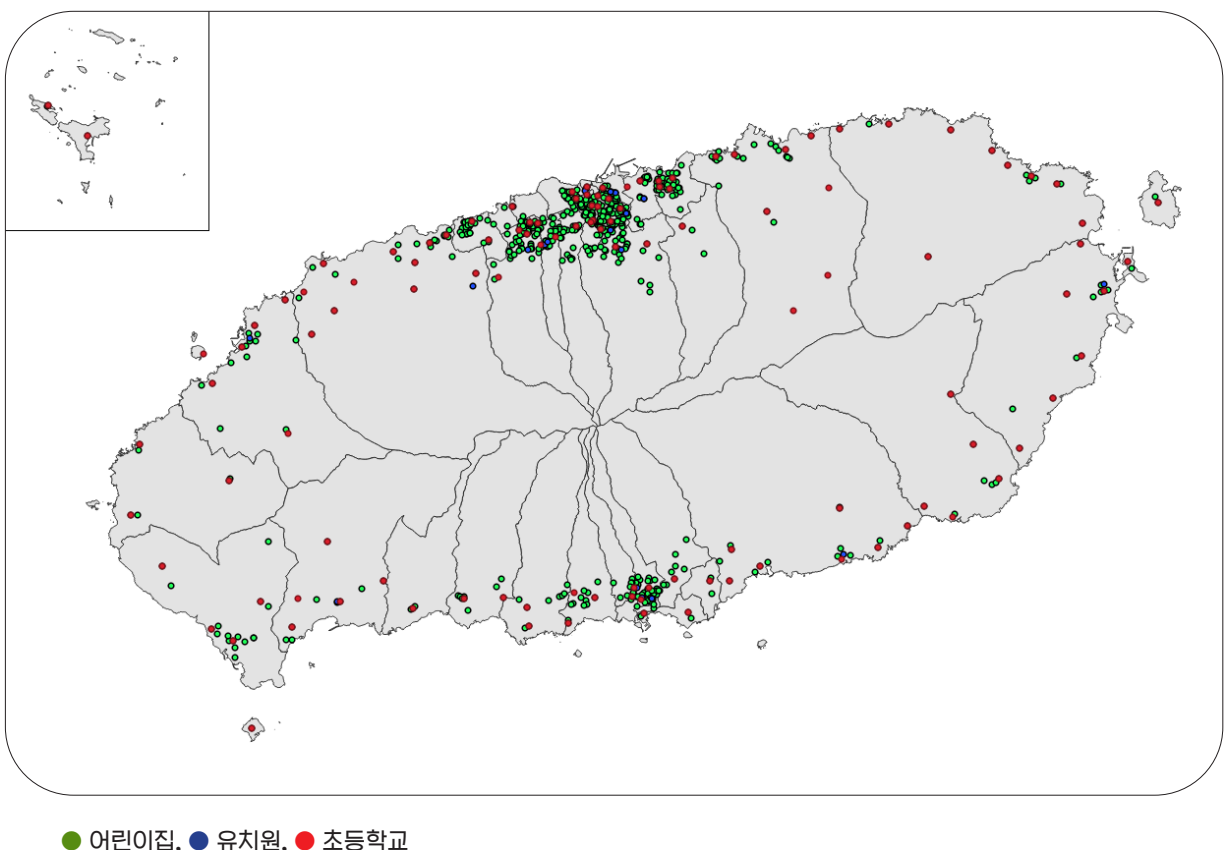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치원알리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 기준

## 2. 제주도내 관련 시설 및 성범죄자 현황

### ■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현황

- 2023년 2월 기준 제주지역 내에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동 보육 및 교육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수는 총 690개소인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 시설 수 분석 결과, 제주시 동 지역이 359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시 읍면지역(122개소), 서귀포시 동 지역(110개소), 서귀포시 읍면지역(99개소) 순으로 시설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종류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452개소), 초등학교(120개소), 유치원(118개소) 순으로 시설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690개소 중 469개소(68.0%)가 동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사설(408개소)이 국공립(44개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설 어린이집 중 약 65%가 제주시 동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별로 다수의 병설유치원이 운영됨에 따라 국공립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의 경우 읍면지역(58개소)이 동 지역(43개소)에 비해 시설 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그림 1 ]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현황 (2023. 2. 기준)





**표 1**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현황 (2023. 2. 기준)

(단위 : 개소)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분교장포함)	합계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제주시	한림읍	11	1	1	4	6	122
	애월읍	10	2	1	9	11	
	구좌읍	5	0	0	9	9	
	조천읍	14	0	0	5	8	
	한경면	3	0	0	3	3	
	추자면	1	0	0	1	2	
	우도면	1	0	0	1	1	
	일도일동	0	0	0	0	0	359
	일도이동	22	2	2	3	3	
	이도일동	4	1	0	2	2	
	이도이동	31	0	2	2	3	
	삼도일동	9	0	0	1	1	
	삼도이동	4	1	1	2	2	
	용담일동	3	0	0	1	1	
	용담이동	9	1	0	1	1	
	건입동	1	1	0	1	1	
	화북동	18	1	1	3	4	
	삼양동	24	0	0	2	2	
	봉개동	2	1	0	1	1	
	아라동	34	6	1	2	2	
	오라동	17	1	0	1	1	
	연동	20	1	2	1	2	
	노형동	43	1	1	3	5	
	외도동	19	4	0	2	2	
	이호동	2	0	0	0	0	
	도두동	3	0	0	1	1	
	소계	310	24	12	61	74	481
서귀포시	대정읍	9	5	0	5	6	99
	남원읍	8	1	1	6	7	
	성산읍	7	1	1	7	7	
	안덕면	5	0	1	4	5	
	표선면	3	1	0	4	5	
	송산동	2	0	0	2	2	110
	정방동	0	0	0	0	0	
	중앙동	1	0	0	1	1	
	천지동	1	0	0	0	0	
	효돈동	2	1	0	1	1	
	영천동	4	1	0	1	1	
	동홍동	20	2	2	0	1	
	서홍동	11	1	0	2	2	
	대륜동	9	3	0	2	3	
	대천동	7	4	0	3	2	
	중문동	7	0	0	1	2	
	예래동	2	0	0	1	1	
	소계	98	20	5	40	36	209
합계		408	44	17	101	120	690

\* 통계 자료는 교육학술정보원 '유치원 알리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제주도내 정보공개 성범죄자 현황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의 신상공개처분이 내려진 성범죄자의 정보를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거나 성범죄자의 전출입시 우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2월 기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제주지역 거주 성범죄자 수는 총 42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읍면동별 거주지 분석 결과, 제주시 동 지역(25명), 제주시 읍면지역(8명), 서귀포시 읍면지역(6명), 서귀포시 동 지역(3명) 순으로 다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현황 분석 결과, 개인정보가 공개된 42명의 성범죄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수는 총 24명으로서, 이 중 8명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 제주도내 성범죄자 현황 (2023. 2.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전체	42	33	25	8	9	3	6
성인 대상	18	14	11	3	4	3	1
미성년자 대상	24	19	14	5	5	0	5
19세 미만	16	12	9	3	4	0	4
13세 미만	8	7	5	2	1	0	1

\* 통계 자료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제주도내 성범죄자 거주제한 예상지역 분석

■ 분석방법 및 대상

- 제주도내 성범죄자 거주제한 예상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 내 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위치 데이터 및 지역 내 거주중인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데이터를 수집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별 주소 정보를 활용하였음
  -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모든 성범죄자의 자료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들의 데이터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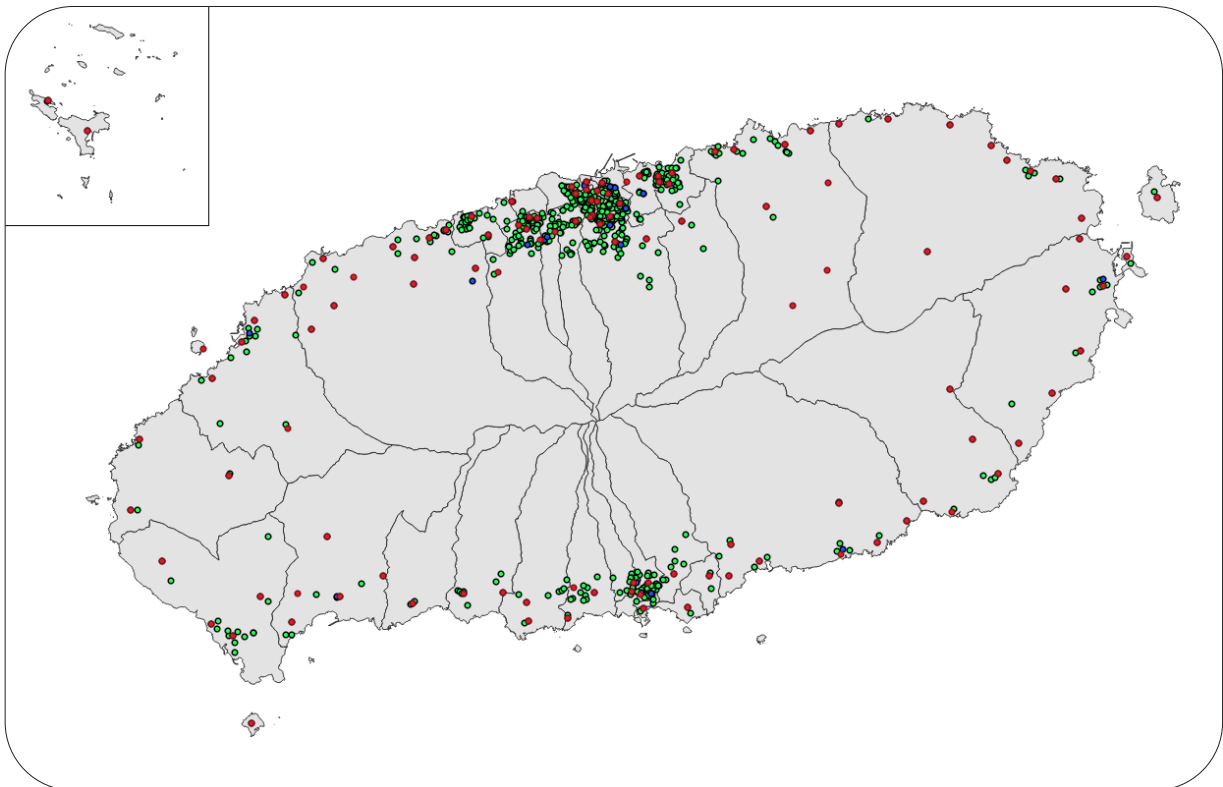


- 시설 및 성범죄자 위치 데이터를 가공한 후 QGIS3.2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제주지역 내 성범죄자 거주제한 예상지역의 분포 현황을 도출함
  - 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500미터 원을 그리고 이를 지도위에 표시하여 시각화하였으며, 시각화한 지도 데이터에 성범죄자 거주지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성범죄자 거주제한 예상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수를 도출함
  - 도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전수가 병설유치원으로서 초등학교와 좌표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설유치원의 데이터만을 적용하였음

## ■ 제주특별자치도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 예측 결과

- 초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시설들이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됨
  - 관련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인 14세 미만 아동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14세 미만 아동 중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수는 54,782명으로서, 전체 아동(90,919명)의 60.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3. 1. 주민등록통계 기준)
-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실거주지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신상정보가 공개된 제주지역 성범죄자 42명 중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총 25명(5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 ] 제주도내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 예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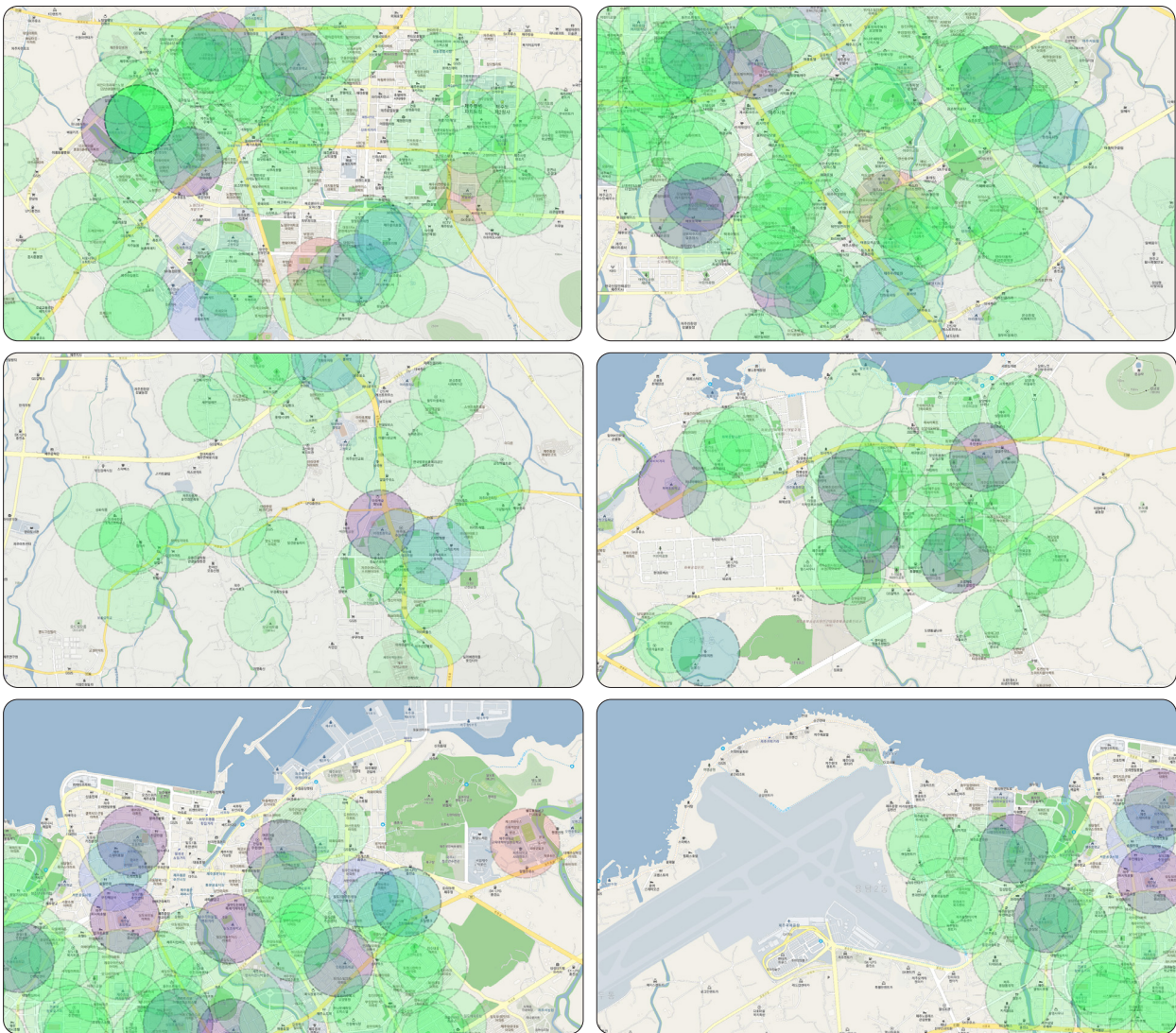
\* 녹색(어린이집), 파란색(유치원), 붉은색(초등학교) 반투명 원은 각 시설 위치 기준 반경 500미터 지역을 의미함



## ■ 제주시 동 지역 내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 예측 결과

- 다수의 인구가 밀집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동 외곽 및 산간지역, 상업지역 등의 경우 거주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 관련 시설의 특성 상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시설 또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대부분 성범죄자 거주제한 예상지역으로 도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해당 지도에 성범죄자 위치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25명 중 19명(76.0%)이 현재 성범죄자 거주제한 예상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림 3 ] 제주시 동 지역 내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 예측 결과



\* 녹색(어린이집), 파란색(유치원), 붉은색(초등학교) 반투명 원은 각 시설 위치 기준 반경 500미터 지역을 의미함



##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법안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중 99.8%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성범죄자로부터 서울시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서울보호법’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대부분의 분석 결과들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대상자들이 포함될 경우 법안 도입에 따른 거주지 이전 대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짐
-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동 외곽 및 산간 지역, 상업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성범죄자 거주제한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성범죄자들이 인구밀집지역 인근 외곽으로 밀려나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실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제주지역 내 성범죄자들이 모두 법안 시행에 따른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총 42명 중 25명(59.5%)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25명 중 19명(76.0%)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 즉, 법안이 도입될 경우 서울시 및 수도권에서 밀려난 성범죄자들이 지방도시로, 동 지역에서 밀려난 성범죄자들이 읍면지역 또는 동 외곽지역 등으로 밀집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점검, 성범죄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사회 공론의 장 마련 등 자체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단순히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성범죄 재발 방지’라는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연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구체적으로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강화, 전자감독관 인력 보강, 피해자 접근금지 제도 보완 등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보완 및 연계가 필요함

